

중국의 대외무역제도 및 대중국 수출계약상 주의사항

법학박사, 변호사 나 승 복

(법무법인 화우)

I. 중국의 대외무역제도 개관

1. 한중간의 최근 수출입량 추이

한국은 중국에 대하여 2001년에는 181억 9,000만달러를 수출하고 133억 300만달러를 수입하였으며, 2002년에는 237억 5,400만달러를 수출하고 174억달러를 수입하였고, 2003년에는 351억 1,000만달러를 수출하고 219억 900만달러를 수입하였으며, 2004. 1.부터 같은 해 7.까지에는 280억 3,400만달러를 수출하고 158억 6,400만달러를 수입하였는바(산업자원부 Web-site, 자료실, 무역통계), 한중간의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2001년에 48억 8,700만달러, 2002년에 63억 5,400만달러, 2003년 132억 100만달러, 2004. 1.부터 동년 7.까지 121억 7000만달러에 달하는바, 그 무역흑자 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2. 중국의 대외무역감독기관

상무부는 국무원으로부터 각급 대외무역기업에 대한 심사,허가권을 위임받고 무역의 정책과 규정을 제정, 집행하며, 국가계획위원회와 협의하여 장기무역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수출입물품목표를 편성하며 이에 대한 집행상황을 감독함. 이러한 직무는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각 직할시, 성, 자치구의 직능부서에 위임됨.

상무부의 경우 대외무역국은 무역제도, 무역질서, 무역촉진, 농산품과 공산품 및 방직품의 수출입을 관장하고, 기계·전기·전자물품수출입국에서는 기계·전기·전자물품(이하 “기전물품”이라 함)의 수출입을 관장하며, 과학기술발전 및 기술무역국에서는 기술무역, 신기술물품의 수출입을 관장하고, 외국투자관리국은 서비스무역을 관장함.

3. 중국의 대외무역주체

중국에서 대외무역권을 가진 기업으로는 ① 상무부 산하 각종 무역전문총공사 및 지사(대외무역을 전담하는 중앙정부 산하의 기업으로서 관련 업무의 경험, 자금력이 뛰어남), ② 국무원 산하 공

업무역공사(각종 생산부문 담당부처가 직접 설립한 무역회사로서 소속기업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을 담당함), ③ 성급 산하의 각종 무역공사, ④ 수출입이 가능한 제조기업(제조업체가 생산용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자체적으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공업과 무역을 연결시키기 위한 무역공사임), ⑤ 외국투자기업 등이 있음.

4. 중국의 WTO가입과 대외무역정책

중국은 WTO에 가입한 2001. 12. <화물수출입관리조례>,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 <수출허가증관리방법>, <수출물품쿼터관리방법>,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 <수출물품쿼터관리방법> 등을 시행하여 수출입쿼터와 수출입허가증제도를 변경하였음.

중국은 WTO가입을 계기로 2005. 1. 1.부터 단계적으로 400여개의 수입물품 관련 비관세조치(허가증, 쿼터, 기전물품의 입찰)를 폐지할 예정임.

II. 중국의 수입관련제도

1. 수입절차 개관

가. 수입전 준비(수입계획허가, 물품수요처조사, 수입자선정)

나. 수입계약의 체결(수입상담, 신용조회)

다. 계약이행(선박확보, L/C등 개설, 대금결제)

라. 수입허가증신청 -> 화물내도 -> 물품검사 -> 수입통관 -> 물품수령

2. 수입허가증과 수입쿼터 및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수입관리

가. 수입허가증과 수입쿼터

수입화물은 수입금지화물, 수입제한화물(수량제한, 기타 제한), 수입자유화물, 수입쿼터관리화물로 분류하고, 그 중 수량제한이 있는 수입제한화물에 대하여는 수입쿼터관리를 실시하며, 기타 수입제한화물에 대하여는 허가증관리를 실시하고, 일부 수입자유화물에 대하여는 자동수입허가관리를 실시함.

수입쿼터허가증 관리대상품목은 상무부가 매년 일괄하여 공고하고, 국가정책 과 무역발전의 수요 및 국내외 시장변화에 따라 이를 조정함. 수입쿼터허가증 관리의 대상이 되는 수입기전물품의 부품이 완제품 총액의 60% 이상이면 완제품으로 간주하여 수입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함.

기전물품의 수입쿼터품목은 수입쿼터증명을 받은 후 이에 근거하여 수입허가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고, 기전물품 중 특정품목으로서 쿼터품목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때에만 수입

할 수 있음. 기술정보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정보산업부의 증명과 세관확인을 거쳐 WTO정보기술협정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수입쿼터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유효기간 내 수입허가증의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함.

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수입관리

외국기업이 출자한 설비, 원자재 중 수입허가증관리품목 이외의 설비와 물자, 수출용 원자재와 부품 및 설비류 등은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수입할 수 있음. 외국투자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합리적 수량 범위 내의 비생산용 물품은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외국투자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합리적 수량 범위 내의 생산용 물품은 수입허가증 없이 기업설립비준증서, 영업허가증 및 수입계약서를 첨부하여 통관함.

3 수입물품검사

가. 검사절차

(1) 검사신고

일반 수입화물의 경우 수입계약에 규정된 클레임신청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0일 전에 약정된 장소(검사신고장소가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화물하역지, 도착지 등)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함.

(2) 표본검사

물품검사기구는 대부분 통계표본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을 추출한 후 물품의 표지, 외관, 수량, 보관현장 등을 검사한 후 오감검사, 물리검사, 화학검사, 계측검사, 생물검사를 실시함.

(3) 수입검사

일반설비의 수입검사의 경우 나무상자에 포장된 설비는 개봉전 외부검사, 상자개봉검사를 거치고, 컨테이너에 포장된 설비는 설비가 항구에 도착한 즉시 현지 물품검사기구의 컨테이너상태검증을 거쳐 수량, 내부상태의 검사를 실시함.

플랜트설비의 수입검사의 경우 화물이 도착한 후 공동검사의 방법을 취하거나 선적 전에 수출국에서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중국에 반입된 후 인가검사를 실시함.

(4) 검사검역증서

검사검역증서는 공증기관 또는 생산자가 발급하는 수입화물의 품질, 수량, 중량, 위생상태 등에 대한 증명으로서 계약조건의 변경시 전체화물의 가격계산기준이 되고, 운임과 하역비 및 관세의

산정자료가 되며, 수입통관의 중요한 증빙이 되고, 분쟁발생시 중요한 증거로서의 기능을 함.

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수입검사

외국투자기업은 ① 물품검사기구가 시행하는 종류표 또는 지방종류표에 속하는 품목, ② 계약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③ 안전관리와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등을 수입하는 경우 물품검사기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물품검사를 실시하거나 물품검사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외국투자기업이 임가공용으로 원부자재 또는 부품을 수입할 경우 계약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기업이 물품검사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다만, 보상무역을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물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4. 수입통관

수취인은 수입화물의 입항신고일부터 14일 내에 수입통관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입화물의 CIF가격의 0.05%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담하게 됨.

수취인이 입항신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통관수속을 밟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이를 매각하여 선적하역비용, 보관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대금을 수취인에게 반환함.

수취인이 수입화물면세증명서, 송장, 화물명세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위 서류들을 심사하여 면세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며, 그 유효기간은 3개월임.

Ⅲ. 중국의 수출관련제도

1. 수출절차 개관

가. 수출전 준비(수출계획, 해외시장조사, 상표등록)

나. 수출계약의 체결(수출상담, 신용조회)

다. 계약이행(물품제조 및 포장, 물품검사증명)

라. 수출허가증신청 -> 선박확보(보험가입) -> 물품선적, 세관신고(선하증권) -> 세관검사, 통관 -> 수입자에 대한 선적통지 -> 대금결제

2. 수출허가증과 수출쿼터 및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수출관리

가. 수출허가증과 수출쿼터

상무부는 매년 관련법령 소정의 물품에 관하여 상무부의 지방사무소, 각 성, 직할시, 자치구, 중앙

각 부문의 무역회사에 할당하는 수출허가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위 수출허가증제도는 원칙적으로 1품목에 1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으로서 1회 통관에 한정되고 그 유효기간은 3개월임. 1품목 1허가증의 제외대상은 6개월의 유효기간 내에 최다 12회까지 통관할 수 있음.

수출허가증관리품목 중 일부는 통관항을 지정하고, 무역전문총공사가 일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등을 근거로 수출가격에 대한 심사도 병행하여 가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수출허가증을 발급한 반면, 일괄적으로 취급하는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수출입협회가 인정한 계약서에 근거하여 수출가격을 심사하고 쿼터량 범위 내에서 수출허가증을 발급함.

수출쿼터신청인은 매년 11월 10일 이전에 상무부 또는 그 수입기관에 수출쿼터를 신청하게 되면, 상무부 등은 전년도 수출실적, 수출가격, 수출공헌도, 관련 규정의 준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출쿼터관리방법 소정의 산정공식 또는 입찰방식에 따라 수출쿼터를 결정함.

수출쿼터품목에는 ①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한 자율수출쿼터관리품목, ② 무역협정을 체결한 수입국에서 수입수량을 제한 품목에 대해서 수출쿼터량을 정한 피동수출쿼터관리품목, ③ 일정 물품에 대하여 유상으로 수출쿼터를 낙찰받도록 하는 입찰수출쿼터품목이 있음.

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수출관리

외국투자기업이 수출허가증관리품목에 해당하는 생산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도별 수출계약에 따라 6개월에 한번씩 수출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함.

외국투자기업이 수출허가증관리품목 또는 쿼터관리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규모, 영업범위 내에서 생산물품을 수출하여야 하며, 그 생산규모나 영업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동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을 신규로 설립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상무부 또는 그 수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수출물품검사

가. 검사절차

(1) 검사신고

검사신고의 대상물품으로는 ① 생산가공 및 포장, 상표도색이 완성되어 운송준비 완료, ② 생산기업 검사합격 후 공장검사합격증 구비, ③ 품질허가제도의 적용을 받는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검시기구가 발급한 품질허가증 또는 위생등록증의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수출물품은 송하인이 계약서 또는 신용장을 접수하여 수출준비를 마친 후 통관신고 또는 화물운송이 시작되기 10일 전에 화물 생산지의 물품검시기구에 수출예비검사화물구비서류와 출국화물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신고를 마쳐야 함.

(2) 표본검사

물품검사기구는 대부분 통계표본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을 추출한 후 물품의 표지, 외관, 수량, 보관현장 등을 검사한 후 오감검사, 물리검사, 화학검사, 계측검사, 생물검사를 실시함.

(3) 수출검사

수출검사는 생산지 물품검사기구의 예비검사시 합격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전 출발지의 물품검사기구가 실시하는 개항지검사로써 개항지까지 운송되는 동안 화물의 파손 여부 등을 검사함.

(4) 검사검역증서

검사검역증서는 공증기관 또는 생산자가 발급하는 수출화물의 품질, 수량, 중량, 위생상태 등에 대한 증명으로서 계약조건의 변경시 전체화물의 가격의 계산기준이 되고, 운임과 하역비 및 관세의 산정자료가 되며, 수출통관의 중요한 증빙이 되고, 분쟁발생시 중요한 증거로서의 기능을 함.

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수출검사

외국투자기업이 ① 물품검사기구가 시행하는 종류표 또는 지방종류표에 속하는 품목, ② 계약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③ 안전관리와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④ 중국상표를 부착하거나 중국산임을 표기하여야 하는 품목 등을 수출하는 경우 물품검사기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함.

중국상표를 부착하거나 중국산임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허가를 받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위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물품검사를 실시하거나 물품검사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외국투자기업이 ① 물품검사기구가 시행하는 종류표 또는 지방종류표에 속하는 품목, ② 국제관례에 따라 외국수입자가 중국에 와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품목 등을 수출하는 경우 중국의 물품검사기관이 수입자를 대신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서 또는 신용장상의 품질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신용장 등을 근거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4. 수출통관

수출화물의 송하인은 화물을 선적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직접 또는 세관에 등록된 통관기업을 통하여 관할 세관에 수출허가증과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출통관신고를 하여야 함.

세관등록을 통하여 직접 통관수속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외국투자기업, 수출입권한을 가진 제조기업 등이 있음.

IV. 중국의 무역구제제도 (반덤핑제도)

1. 중국반덤핑법 개관

중국의 반덤핑제도에 관련된 법령으로는 모법인 대외무역법, 핵심법규인 반덤핑조례, 세부적 절차법규의 하나인 국가경제무역위원회산업피해판정공청회규칙 등이 있음.

대외무역법은 1994. 5. 12. 중국 정부가 GATT 체약국 지위의 회복을 위하여 협상과정에서 제정한 것으로서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음.

동법 제30조는 "정상가격 이하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의 기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킬 때에는, 국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피해나 피해의 우려 또는 설립의 지연을 해소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반덤핑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음.

중국반덤핑조례(이하 '신반덤핑조례'라 함)는 2002. 1. 1. 개정시행된 것으로서 WTO반덤핑협정을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반덤핑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핵심법규임. 개정전에는 반덤핑반보조금조례(1997. 3. 25. 시행)가 반덤핑조치의 핵심법규였으나, 위 조례는 총 4장 35개조항에 상계관세에 관한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을 만큼 반덤핑의 실체적 조건과 절차적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반덤핑조사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음.

산업피해판정공청회규칙은 신반덤핑조례가 공포되기 전인 1999. 10. 27. 제정된 것으로서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이 출석한 자리에서 중국의 관련산업이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심리하는 세부적 절차규정임.

2. 중국반덤핑법의 특색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반덤핑조례의 특색은 WTO반덤핑협정을 대폭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신반덤핑조례는 기존의 반덤핑및반보조금조례에서 사용하던 용어들을 변경하고 실체적 요건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음. 개정 전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동종물품'으로 변경하였고, 국내산업을 정의함에 있어 국내 동종물품의 총 생산량의 '대부분'을 '주요부분'으로 변경하는 등 다수의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미소마진에 관한 규정과 동종물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실체적 규정을 구체화하였음.

둘째, 신반덤핑조례는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규정들을 보완하거나 신설하였음. 예컨대, 신반덤핑조례가 시행되기 전에는 조사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결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나, 신반덤핑조례의 시행 후에는 상무부가 신청서와 관련 증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개시결정 전에 수출국정부에게 통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셋째, 신반덤핑조례는 외국정부의 중국수출기업에 대한 차별대우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음. 즉, 어떠한 국가나 경제지구가 중국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차별적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국은 실제사정에 근거하여 당해 국가나 경제지구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WTO반덤핑협정상의 요건구비 여부에 대한 심사가 실제사정에만 근거하여 보복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므로, 위 협정에 위배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중국의 반덤핑절차

중국의 반덤핑절차는 대부분 WTO반덤핑협정의 절차규정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조사기관의 차이 등 몇 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우리 나라의 반덤핑절차와 유사하다고 할 것임. 중국의 반덤핑절차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신청인이 반덤핑조사개시신청서와 관련증거를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에 제출하면, 위 수출공평무역국은 위 신청서와 관련증거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 후 공고하게 됨.

중국에서의 반덤핑실무상, 피신청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내에 수출금액과 물량을 기재한 응소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신청인이 상무부로부터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또는 피신청인국의 외교기관이 상무부로부터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7일 내에) 위 두 조사기관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위 질문서제출기간은 조사기관의 허가를 받아 연장이 가능함).

위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상무부는 피신청인의 조사대상기간 내 조사대상물품의 수출에 덤핑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중국의 국내산업이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 등을 입었는지 여부를 조사함. 이와 같은 반덤핑조사는 조사개시공고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종결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그후 상무부는 덤핑의 존부에 대하여,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의 존부에 대하여 각 예비판정을 내린다. 위 두 조사기관의 예비판정이 부정판정일 경우에는 반덤핑조사가 바로 종결되는 반면, 긍정판정일 경우에는 국무원세칙위원회가 조사개시공고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잠정반

덤핑조치결정과 함께 잠정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현금보증금이나 보증서 등 담보의 제공을 요구함.

수출자는 예비판정이 난 후 상무부에 가격의 인상 또는 덤핑가격으로 수출을 정지할 것을 약속하는 가격승낙을 신청할 수 있다. 가격승낙이 성사되지 아니한 경우 조사기관이 공청회, 현장실사 등 조사를 진행하여 최종판정을 내리면, 국무원세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수입자에게 최종판정 이후의 수입분에 대하여 부과하나, 반덤핑관세의 징수기한과 가격승낙의 이행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함. 신청인은 위 기간 동안 매년 덤핑과 피해의 계속가능성 및 재발가능성에 대하여 연례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V. 대중국 수출계약 체결시 주의하여야 할 법률문제

1. 계약체결의 방식

수출대상 물품이 고가이거나 다량인 경우에는 통상 서면에 의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되나, 그렇지 아니하거나 상대방과의 신뢰가 형성된 경우에는 구두에 의한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서면에 의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2. 계약당사자 및 물품

중국에서는 대외무역권한을 가진 기업만이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수 있고, 수입자가 대외무역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권한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수입자가 대외무역권한을 가진 기업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함.

수출자는 품명, 품질, 사양, 수량, 중량, 원산지 등 물품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특히 수출자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월별 또는 연도별 최소공급량을 기재하여 일정한 수량의 수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함.

3. 선적사항 및 지불조건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선적일자나 선적서류의 수정을 거치지 않고 구두에 의한 합의에 의존하는 경우 나중에 신용장의 기재내용과 선적서류상의 기재내용이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므로 두 서류의 내용이 일치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함.

T/T방식이나 L/C방식의 경우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은 낮으나, D/A방식에 의한 지급의 경우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된 후 대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수출자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초기 수입계약과정에서 수입자로부터 수입대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여 두거

나 수출보험공사에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함.

4. 인도조건, 품질보증 및 검수

Incoterms 2000에 의하면 물품의 수출계약에서 인도조건은 EXW(적출지인도), FOB(본선인도), CFR(운임포함인도), CIF(운임, 보험료 포함인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출물품의 종류와 성질, 운송기간의 장단, 수입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인도조건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수출자가 공급한 물품의 품질은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므로 수출계약서에 품질하자 등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

물품의 검수에 권한이 수입자에게 있는 경우 수입물품의 품질, 수량, 중량, 상태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출자가 직접 물품의 검수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되 수량의 경우는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오차에 관한 문구를 포함시켜야 할 것임.

5.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수출계약에 있어서 수입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이행의 최고 없이 해제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하게 되는데,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상당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는지 여부가 해제의 효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러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계약이행에 관한 심리적 부담을 주고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위약금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6. 준거법 및 분쟁해결

준거법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그 동안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한 무역계약조건의 해석에 관한 통일규칙(Incoterms 1990 또는 Incoterms 2000)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음.

우리 나라가 2004. 2. 17. 가입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2004. 2. 현재 중국을 포함한 62개국이 가입)이 2005. 3. 1.부터 발효되므로 당사자들이 배제하지 않는 한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위 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당사자간에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1차적으로 중재, 2차적으로 소송에 의한다는 취지의 문구나 또는 중재와 소송 중에서 선택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중재합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중재기관, 중재규칙, 중재장소, 중재언어, 중재인, 최종적 구속력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이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